



제07-51호

[상세 내용]

EU 경제 동향 및 2008년 전망

김 홍 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팀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김 균 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Tel: 3460-1064)

주요 내용

- ▣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2007년 EU 경제는 2006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EU 경제는 경기호조세를 이어가면서 2006년(3.0% 성장)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2.9%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006년에는 투자와 수출 확대가 EU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반면, 2007년에는 경기호황의 파급효과로 인한 고용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그리고 낙관적 전망에 따른 투자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말부터 EU의 경기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증가, 기준금리 인상과 신용경색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경기 부진, 주요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문제와 복지 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정책 추진 등이 서서히 EU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EU의 2008년 경제성장률은 신용경색, 유로화 강세, 고유가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2007년보다 다소 낮은 2.4%로 전망됨.

 - 2008년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민간소비 및 총투자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기 둔화와 유로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은 2007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시장 불안 및 주택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국과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이 2007년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지원을 통한 소비 및 투자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는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1. 2007년 EU 경제동향

- 2006년 EU 경제는 3.0% 성장하여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는데, 세계경기 호황에 따른 수출 확대와 투자 확대가 경기 상승을 주도하였고 민간소비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이에 일조하였음.
- 2006년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8.7%로 2005년의 5.5%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총 투자 증가율도 2005년 3.0%에서 2006년에는 5.9%를 기록하여 두 배 가까이 증가함. 한편 가계소비 증가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2.2%로 소폭 상승함.
- 2007년 EU 경제는 경기호조세를 이어가면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인 2.9%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1/4분기에 전기대비 기준으로 0.8% 성장을 기록했던 EU 경제는 2/4분기에 0.5% 성장으로 경기가 다소 위축되었으나 3/4분기에 다시 0.8%로 반등함.
- 2007년 분기별 성장률을 전년동기대비로 보면, 1/4분기 3.4%, 2/4분기 2.8%, 3/4분기 2.9%로 비교적 견실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06년 EU의 경제성장을 투자 및 수출 확대가 주도했다고 한다면, 2007년에는 수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호황이 민간부문으로 파급되어 민간소비 확대와 투자 증가가 EU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표 1. EU27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1/4	2/4	3/4
가계소비	2.2	1.7	2.2	2.3	0.2	0.6	0.6
정부소비	1.5	1.7	2.0	2.0	0.7	0.1	0.6
총 투 자	3.2	3.0	5.9	5.6	1.8	0.0	1.1
수 출	7.3	5.5	8.7	6.3	1.0	0.7	2.6
수 입	7.4	5.9	8.7	6.3	1.4	0.1	2.9
GDP	2.5	1.8	3.0	2.9	0.8	0.5	0.8

주: *2007년 연간 자료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예측치며, 분기별 증가율은 전기대비 기준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Economic Forecast, Autumn 2007; Eurostat.

- 2007년 가계소비는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구매력 확대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금리, 주요국들의 복지 축소 등의 경제개혁은 가계소비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가계소비 증가율은 2005년 1.7%, 2006년 2.2%, 2007년 2.3%(EU 집행위원회 예측치)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분기별 증가율을 보면 1/4분기에 전기대비 0.2%, 2/4분기와 3/4분기에는 동일한 0.6%를 기록하며 견실한 증가세를 보임.
- 경기상승에 따른 고용확대가 지속되면서 실업률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 고용증가율: 0.6%(2004년) → 0.8%(2005년) → 1.5%(2006년) → 1.5%(2007년, 예측치)
 - 실업률: 9.1%(2004년) → 8.9%(2005년) → 8.2%(2006년) → 7.1%(2007년, 예측치)
-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상황은 소비 증가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
 - ECB는 2005년 12월~2007년 6월간 모두 8회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 2007년 12월 현재 기준금리는 4.0%로 2001년 3/4분기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임.
- 한편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우, 실업률 감소 및 임금 상승 등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의 부가가치세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소비 증가는 상당히 제한적임.
 - 2007년 독일의 실업률은 9.8%로 예상되어 2006년의 10.7%에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소비증가율은 전년대비 -0.1%로 오히려 위축될 전망이다. 총투자(5.8% 증가)와 수출(7.7% 증가)이 독일 경제성장의 원동력임.
- 총투자 증가율도 2007년에 5.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6년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07년 3/4분기 총투자 증가율은 1.1%를 기록하여 2/4분기 0.0% 증가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기업들은 그동안의 수출 호조와 임금인상 억제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상황이 호전되었으며, 주요국 정부의 친기업적 개혁정책으로 인해 사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정부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의 회원국들은 긴축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
- 2007년 EU 전체의 평균 정부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2.0%로 예상되나, 이탈리아는 0.7%, 포르투갈은 -0.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호조로 수출은 여전히 견실하지만 내수 확대에 따른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 수출 증가율이 2006년의 8.7%에서 2007년에는 6.3%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수입 증가율도 6.3%로 예상됨.
- 수입 증가의 요인으로는 투자와 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와 유로화 강세를 들 수 있음.
- 한편 EU의 주요 회원국들은 2007년에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1/4분기에 전기대비 0.5% 성장했던 독일경제는 2/4분기 0.3% 성장하며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3/4분기에 다시 0.7% 성장하며 회복됨.
- 그러나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보면, 1/4 분기에 3.6% 성장했던 독일경제가 3/4분기에는 2.5%로 하락하여 향후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
-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3/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0.7%와 0.4% 성장하며 2/4분기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임.
- 반면 영국과 스페인의 3/4분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소폭 하락하였는데, 특히 스페인은 그동안 경기 상승을 주도했던 건설부문이 위축되면서 3/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7%를 기록, 1/4분기 1.0%, 2/4분기 0.9% 성장에 이어 점차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임.

표 2. EU27 및 주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4	2/4	3/4
EU 27	2.5	1.8	3.0	0.8	0.5	0.8
EA 13 ¹⁾	2.0	1.5	2.8	0.8	0.3	0.7
독 일	1.1	0.8	2.9	0.5	0.3	0.7
프 랑 스	2.5	1.7	2.0	0.6	0.3	0.7
이탈리아	1.2	0.1	1.9	0.3	0.1	0.4
스 페 인	3.3	3.6	3.9	1.0	0.9	0.7
영 국	3.3	1.8	2.8	0.8	0.8	0.7

주: 분기별 성장률은 전기대비 기준임.

자료: Eurostat.

2. EU 경제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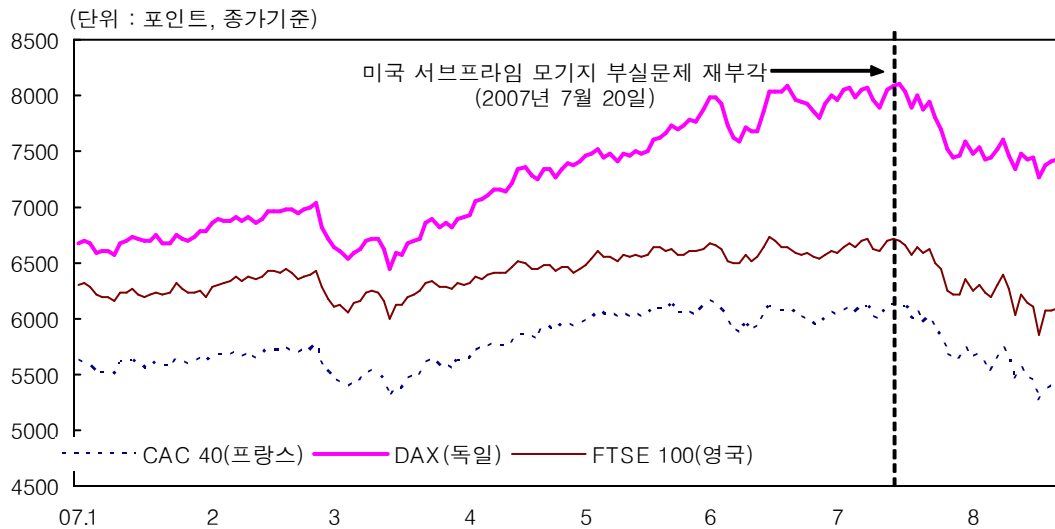
가. 서브프라임 사태(sub-prime crisis)

- 2007년 8월 9일 프랑스의 BNP 파리바가 12억 유로(22억 달러) 규모의 3개 자산유동화(ABS)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이 급속히 확산됨.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다시 부각된 2007년 7월 20일 이후 유럽의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음(그림 1 참조).
- 유럽중앙은행(ECB)은 서브프라임 채권에 투자한 유럽계 금융기관들의 부실 확대에 의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거나 유럽에서 서브프라임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 등을 주시하며, 8월 9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총 2,800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 투입하였음.

1) 유로지역(Euro area)은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Monetary Union)에 가입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 일통화(유로화)를 사용함. 기존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등 12개국이었으나 2007년 1월부터 슬로베니아가 가입하여 현재는 13개국임. 또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금년 1월 EU25에 가입하여, 2007년 현재 EU 회원국은 27개국으로 확대됨.

그림 1. 유럽 주요국 주가지수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 또한 영국에서는 2007년 9월 14일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금융권 신용경색의 여파로 고전하는 영국의 대형 모기지 은행인 노던록(Northern Rock, 영국의 5대 모기지 은행)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신용경색 심화로 유동성 부족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
- 자금난을 겪는 금융업체에 중앙은행이 최종 대출자로서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1998년 은행법 개정 이후, 노던록은 중앙은행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는 첫 번째 금융업체가 되었음.
- 노던록에 대한 영란은행의 긴급자금 지원이 발표되자 노던록의 주가는 14일 하루 32%나 추락하였고 이에 다른 은행들의 주가가 동반 추락하기도 하였으며, 노던록에서 14~15일간 약 20억 파운드(전체 예금의 8.3%)의 예금인출이 발생함.
- 영국의 재무부와 영란은행이 9월 17일 예금액을 모두 보장하는 예금지급 보증 조치와 18일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44억 파운드의 유동성 공급을 발표한 후 노던록 관련 금융시장 위기는 일시 해소됨.
- 그러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악화로 영국의 은행간 조달 금리가 급등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어, 대형 모기지 은행의 경우 자구책 마련 및 은행간 차입 등으로 유동성을 보완하고 있으나, 중소형 모기지 은행의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 유동성 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나. 유럽 주택경기 급락 가능성

-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국가들의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 신용 경색 등으로 주택금융이 과거보다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체율 증가, 주택가격 하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EU 회원국 중 스페인,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 주요국들은 최근 수년 동안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물가상승률을 제정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두 자리 수를 기록하였음.
- 다만 독일은 실질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유럽중앙은행 및 영국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간 금리 수준이 상승한 가운데, 2007년 8월 이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급상승하고 대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경기가 부진한 상태임.

표 3. 주요 EU 회원국들의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단위: 전년대비 %)

	81~90	91~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스페인	6.6	1.3	6.5	12.8	16.3	14.9	10.9	6.3	3.8
프랑스	0.7	0.1	6.0	6.2	9.3	12.5	13.2	10.1	6.8
영국	6.8	1.1	6.9	14.6	14.5	10.3	3.5	3.8	8.3
덴마크	-0.3	3.1	3.5	1.3	1.1	7.9	15.6	19.2	3.4
독일	-1.6	0.1	-1.9	-3.3	-2.0	-3.8	-2.0	-1.1	-0.6

주: *2007년은 상반기만 해당됨.

자료: Eurostat.

- 주택가격의 급등은 그동안 부(wealth)의 효과를 일으켜 가계소비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모기지 대출에 의존하여 주택을 구매한 가계들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채무부담이 높아져 향후 가계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모기지 대출이 변동금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경우, 가계의 채무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²⁾

2) 미국은 모기지 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92%에 달하지만, 영국은 사실상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임. 즉 영국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62% 정도(2007년 상반기 기준)이나 이 중 95%가 처음 2년간 고정금리 지급 후 잔여기간 동안 변동금리로 변환되는 구조임.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모기지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커지게 됨.

-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매매차익을 기대한 주택모기지 대출도 크게 증가한 영국의 경우, 금리가 상승하자 가계부채도 급증하여 2006년 말 1조 3,000억 파운드로 지난 10년 동안 3배로 증가하였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997년 105%에서 2006년 160%로 확대된 상태임.

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정책

- 유럽중앙은행(ECB)은 2003년 6월 이후 2년 반 동안 2.0%로 유지했던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4.0%까지 인상하였음.
- 고유가와 원자재 및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높였기 때문임.
- 그러나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에 따른 신용시장 혼란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12월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4.0%로 동결하고 있음.
- 현재 고유가 등으로 인플레이 압력이 높은 상태이지만 임금상승률은 현재까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유럽중앙은행은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7년 11월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유로지역(Euro Area)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에 달하였음.
- 반면 2007년 2/4분기 유로지역 임금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2.5%를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는 임금인상률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급격한 임금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11월 말 유로화는 1.497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바, 이러한 유로화 강세는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켜주고 있음.

라. 회원국의 재정적자

- 유로지역의 경기회복과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주요 회원국의 재정적자 수준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EU 회원국들의 긴축재정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독일,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2003년 이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여 EU 안정·성장협약(SGP)³⁾의 재정준칙을 위반해 왔음.
- 2006년에 와서 프랑스와 독일의 재정상황은 뚜렷이 개선되었는데, 독일의 경우 경기상승 지속으로 인한 세수 증대로 2005년 GDP의 3.4%였던 재정적자가 2006년에는 1.6%로 떨어졌으며, 프랑스도 재정적자는 2005년 GDP의 2.9%에서 2006년에는 2.5%로 낮아졌음.
- 한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재정 상태는 우려할 만한데, 2005년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GDP의 4.2%였으나 2006년에는 오히려 4.4%로 상승하였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같은 기간 GDP의 6.1%에서 3.9%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안정·성장협약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2007년에는 다수의 회원국들이 EU 안정·성장협약의 재정준칙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누적된 정부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들의 정부부채 규모는 GDP의 60%를 초과하고 있음.

표 4. 주요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

(단위: % of GDP)

	재정적자					정부부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3	2004	2005	2006	2007*
독일	-4.0	-3.8	-3.4	-1.6	0.1	63.8	65.6	67.8	67.5	64.7
그리스	-5.6	-7.3	-5.1	-2.5	-2.9	97.9	98.6	98.0	95.3	93.7
프랑스	-4.1	-3.6	-2.9	-2.5	-2.6	62.9	64.9	66.7	64.2	64.3
이탈리아	-3.5	-3.5	-4.2	-4.4	-2.3	104.3	103.8	106.2	106.8	104.3
포르투갈	-2.9	-3.4	-6.1	-3.9	-3.0	56.9	58.3	63.7	64.8	64.4

주: *2007년은 EU 집행위원회의 예측치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Economic Forecast, Autumn 2007.

3)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회원국들이 건전한 재정균형과 낮은 공공부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으로, 경제통화동맹(EMU) 참가국이 매년 재정수립조건(재정적자를 경상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고, 정부부채 잔액이 경상 GDP의 60% 이하가 되어야 함)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

마.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

-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복지혜택 축소가 핵심 내용이며, 이에 따른 미래의 불안감은 가계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메르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연금 및 보험제도 개혁,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 중임.

- 노조의 경영 참여를 축소하는 한편 6개월이던 수습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 정책이 추진됨.
-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2007년 2월 2일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3월 9일에는 연금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차 높이는 연금 개혁법안도 하원을 통과하였음.
- 또한 독일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39%의 현 법인세 수준을 2008년까지 30% 이하로 감축하는 세법 개정안도 2007년 3월 14일 의회에서 통과됨.

- 프랑스는 지난 2006년 4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도입이 좌절된 바 있으나 2007년 5월 6일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신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는 수요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노동·사회복지·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공급중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프랑스 신정부는 2007년 5월부터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고용유인을 위한 주 35시간 법정노동시간제 폐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공무원 인원 축소를 통한 인건비 절감, 공기업 연금제도 개혁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고용계약, 실업보험 등 노동 및 사회복지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제도개혁을 추진할 전망이다.

- 한편 스웨덴에서는 사민당계 정당을 누르고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달성, 2006년 10월 출범한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 총리의 우파 연합정권이 세금감면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 감소, 실업 및 병가수당 자격조건의 엄격화 등을 통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여 고용과 성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임.

- 새 정권은 2007년 1월 중간소득층에 대한 특별세금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부유세⁴⁾를 폐지하였으며, 고용주가 병가 중인 근로자들의 질병수당 비용의 15%를 부담하던 제도도 폐지함.

4) 가족 모두의 총 재산이 독신의 경우 150만 크로나(약 20만 달러), 결혼한 부부의 경우 300만 크로나(약 4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초과 재산에 대해 1.5%를 부유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실업수당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자격조건도 엄격하게 하였으며, 질병으로 인한 병가수당도 최대 지급액을 종전의 75% 수준으로 축소하고 수급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함.
- 의료보험 보상액 상한선을 월 33,000크로나에서 24,800크로나로 인하하며 의료비 및 의약품의 자가 부담액을 인상함.
- 한편 이러한 주요국들의 경제개혁은 사회보장 축소뿐만 아니라 친기업적 정책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슈뢰더 전임 총리의 Agenda 2010, 그리고 메르켈 현 총리의 개혁정책 추진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켜 독일 경제 회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3. 2008년 EU 경제전망

- EU의 2008년 경제성장률은 신용경색, 유로화 강세, 고유가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2007년 (2.9%)보다 다소 낮은 2.4%로 전망됨.
- 고용의 꾸준한 확대, 2008년 하반기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증가세를 지속하여 전년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07년 1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독일의 경우 2008년에는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총투자 증가율도 3.5%로 완만한 증가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지출은 여전히 긴축정책 기조로 인해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증가율은 세계경기의 둔화 및 유로화 강세 지속으로 2007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5.8%로 예상되며, 반면 수입 증가율은 역시 내수 확대와 유로화 강세로 인해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6.1%로 전망됨.
- 5.25%였던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2007년 9월, 10월, 12월 연속 인하되어 4.25%까지 하락하였고 2008년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되는 반면, ECB는 최소 2008년 3/4분기까지는 현재의 기준금리(4.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8년에도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가치는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5. EU27의 실질 GDP 추이 및 전망

(단위: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민간소비	2.2	1.7	2.2	2.3	2.4	2.2
정부소비	1.5	1.7	2.0	2.0	2.0	1.9
총 투 자	3.2	3.0	5.9	5.6	3.5	3.4
수 출	7.3	5.5	8.7	6.3	5.8	5.8
수 입	7.4	5.9	8.7	6.3	6.1	5.8
GDP	2.5	1.8	3.0	2.9	2.4	2.4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Economic Forecast, Autumn 2007.

- EU 주요 회원국들의 2008년 경제성장률도 2007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프랑스는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경기 부진의 영향이 큰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영국은 2007년 3.1%에서 2008년에는 1.9~2.3%로, 스페인은 같은 기간 3.8%에서 2.4~3.0%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제성장률도 2007년 2.5% 내외에서 2008년에는 1.8~2.1%로 하락하고, 이탈리아도 같은 기간 1.8% 내외에서 1.1~1.4%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단기적으로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는 수요증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는 2007년 1.9% 성장한 후 2008년에는 1.7~2.0% 성장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6. 예측기관별 주요 EU 회원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EU 집행위원회		OECD		IMF		Global Insight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EA13	2.6	2.2	2.6	1.9	2.5	2.1	2.6	1.9
독 일	2.5	2.1	2.6	1.8	2.4	2.0	2.7	2.1
프 랑 스	1.9	2.0	1.9	1.8	1.9	2.0	1.8	1.7
이탈리아	1.9	1.4	1.8	1.3	1.7	1.3	1.7	1.1
스 페 인	3.8	3.0	3.8	2.5	3.7	2.7	3.8	2.4
영 국	3.1	2.2	3.1	2.0	3.1	2.3	3.1	1.9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Economic Forecast, Autumn 2007; IMF(2007),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7; OECD(2007), Economic Outlook, December 2007; Global Insight(2007), Online Analysis, November 2007.